

‘사람 살기 좋은 접경지역 만들기’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첫걸음

최문순
화천군수

변화의 갈림길에 선 ‘접경지역’

남과 북의 ‘경계지’인 접경지역은 우리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지만, 반세기 넘게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반면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지위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고, 여러가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일이 반복됐다.

최근 수년간, 접경지역은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 있었다. 일어날 것 같지 않던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국방개혁 2.0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국가안보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필연적으로 군사도시, 군인경제 등 분단 이후 70여 년간 형성된 접경지역만의 독특한 삶의 형태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제 변화의 방향이 중요한 때가 왔다.

변화의 방향이 정치적 셈법에 따른 생색내기식 정책 등 피부에 닿지 않는 거대 담론만을 향해서는 안 된다. 안보를 단단히 하는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을 ‘경계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즉, 접경지역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완충지’ 접경지역의 새로운 소명

분단 이후 DMZ를 품은 접경지역은 마주 달리는 자동차 사이에 세워진 거대한 스펀지 벽처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완충지 역할을 해왔다. 통일이 되면, 이러한 접경지역의 소명은 소멸하게 된다. 접경지역의 효용은 통일 이후 가치를 더할 것이 자명하다. 통일은 우리가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의 획적 분단에서 종적 연결을 가져올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접경지역은 급격한 교류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통일이 된다고 해서 수만 명의 평양시민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서울에 곧바로 들어와 살 수는 없을테니 말이다.

변화의 충격을 받아낼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접경지역이 유일하다. 통일과정에서 남과 북의 주민들이 삶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은 필수적이다. 통일시대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주민 간 공존은 곧 완전한 인적·물적·군사적 통일을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은 지금부터 변화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접경지역 주민부터가 생활의 불편이 없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외부에서도 접경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획일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라시아 철도를 뚫고, 남북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과감히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균형감 있는 통일정책이자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사람 살기 좋은’ 화천을 위한 준비

화천군의 도전과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 내에 교육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하였고, 유일하게 지역 출신의 모든 대학생에게 재학 기간 등록금 전액과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학원을 대신해 수십 종류의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이 지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고, 화천학습관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천국민문화체육센터가 올해 문을 열었고,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공공실버주택과 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산골 마을 곳곳에는 체육관과 복지시설이 들어섰으며, 작은 영화관 3곳에서는 쉬지 않고 최신 개봉작이 상영된다.

비록 인구 2만 5,000명의 지자체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본질적 복지가 일생의 사이클을 돌며 순환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상황은 열악하고 거미줄 규제는 그대로다. 화천군의 힘만으로는 ‘사람 살기 좋은 곳 만들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통일이 되면, 접경지역이라는 표현이 더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접경지역은 ‘경계지’가 아닌, 통일국가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접경지역에 사회간접자본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에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래서 접경지역을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미리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군인의 주소 이전을 통해 서류상 인구를 늘려보겠다는 발상 대신, 정부 지원을 명문화한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 등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에서 ‘폐광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통일시대의 중심지가 될 접경지역이 폐광지역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 입맛이 쓴 것도 사실이다.

“화천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본질적 복지가
일생의 사이클을
돌며 순환되고
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의견이며,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IG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
UNIFICATION-NORTHERN RESEARCH CENTER

발행번호

No. 21-9

발행일

2021년 7월 1일

통일·북방정책포커스는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본 포커스에서는 통일·북방과 관련한 이슈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